

# 자유민주주의의 공간: 1960년대 <사상계>의 민주주의론 검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 1. 문제제기

1960년대의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나? 만약 그렇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 되었나?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대체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는 당시 한국정치에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이념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지닌 의미 있는 세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두 가지 점이 제시되곤 한다. 첫째,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 부재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자유민주주의가 서양으로부터 외래 이념으로 전파되었으나 한국사회 내에는 정작 그 이념의 실질적 작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통과 인적·물적 기반이 결여되어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적은 냉전의 맥락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곧 반공주의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허울에 불과했으며 실질적 차원에서 있어서는 권위주의가 작동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허울과 실질의 괴리는 냉전이라는 환경적 조건이 규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1960년대의 한국정치가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일 년 남짓의 기간을 제외하면 줄곧 권위주의 내지 독재 정부 아래 놓여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의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이름 이외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를 쫓는 별 의미 없는 작업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 그리고 남북대결이라는 한반도 분단의 구조 아래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꿈꾸고 설계했던 일단의 지식인 그룹 존재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바로 <사상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정치적 논의를 전개해가던 지식인 그룹이다.

<사상계>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장준하에 의해 창간되어 1970년 5월을 마지막으로 폐간될 때까지 한국 지성계를 대표하는 고급교양지였다. 창간호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상계는 그 목적을 “자유 평등 평화 번영의 민주사회건설”에 두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계 지식인의 이념적 좌표를 표상하는 대표적 개념이었다. <사상계>를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 지식인들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혁신계’라고 불린 보다 진보적 지식인 그룹과도 차별성을 유지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강력한 반공주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동시에 후진성의 탈피를 위한 근대화 과제에도 강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떠

올리게 된다. <사상계>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무엇을 꿈꿨는가? 이들 지식인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들의 모색은 왜 실패했는가? 이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꿈은 애당초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것이었나? 또 그 실패의 경험이 이후의 한국정치사에 남긴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아울러 1960년대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좌절이 21세기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비록 한국정치의 역사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가능성에 대해 묻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정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왜 1960년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는 근대화의 화두가 중점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박정희 정부에 의해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이로써 한국현대정치사의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의 문제로서 근대화와 함께 민주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근대화의 맥락 속에서 파악했다. “한국정치 「근대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정치의 「민주화」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보았던 것이다.<sup>1)</sup>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던 지식인들이 1960년대 한국정치의 전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1960년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실제적 작동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명분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다른 이념의 도전을 받지 않던 시기이기도 하다. 해방 직후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각종 제안과 구상은<sup>2)</sup>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냉전의 격화와 함께 한국정치에서 유효성을 크게 상실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의 유일한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외양은 유지되었다. 제한적으로나마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었고, <사상계> 같은 잡지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활동 공간이 유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960년대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름과 현실 사이에 점차 괴리를 노정하게 됨으로써 이념의 실현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명분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이루어졌던 자유민주주의 지식인들의 이론적 실천적 고뇌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고찰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1960년대의 한국정치의 주요한 흐름에 <사상계>가 어떻게 기여하고 대응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4.19에서 5.16으로의 극적인 전환, 둘째, 2년 반의 군정을 거쳐 민정이양을 통해 제3공화국이 성립되는 과정, 그리고 셋째, 박정희 체제가 한일회담 반대로 촉발된 6·3 사태와 같은 위기를 겪으면

---

1)李克燾, 「韓國 近代政治意識의 發展 - 沮害要因의 除去와 建設的 構想」, 『사상계』 제130호 (1964년 1월), p.246.  
2) 이에 대해서는 김정인, 「민주주의, 해방기 분열 혹은 통합의 아이콘」, 이경구 외, 『한국의 근현대, 개념으로 읽다』 (서울: 푸른역사, 2016) 참조.

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통해 권력연장을 시도하는 과정을 <사상계>의 눈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 2.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이해

사상계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역사에 민본주의 전통이 있었다하더라도 이것을 근대적 민주주의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천관우). 오히려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비로소 한국에 이식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서방 특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의미했다. <사상계>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계열에서 거론되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공적 민주주의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만 보다면 이들은 혁신이나 진보와는 거리가 있는 보수적 지식인 집단이었다.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던 바, 그 가장 큰 이유를 <사상계>의 지식인들은 이승만의 독재에서 찾았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유지와 이권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가 종식된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사상계>의 필자들은 전통과 근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전통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적 이행에서 민주주의 미성숙의 이유를 찾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후진사회’로서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였고, 민(民)의 정치의식, 즉 ‘민도(民度)’도 높지 않았다. 게다가 자연과 혈연 등의 전통사회의 연줄구조가 근대화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작동하였는바, 이러한 요인들이 근대화 및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이해되었던 것이다.

한 필자는 후진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주의 수입 이후 정착이 힘든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민주정치제도가 수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전통적인 성장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관념적으로 먼저 이해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사회의 비극은 이러한 관념이 체험되고 생활화될 태세를 사회가 갖추지 못한데 있다. [중략] 더욱이 동양사회는 급격한 변동의 과정을 밟고 있으므로 여러 사회조직이 고정화 되지 못하고 극단한 유동을 나날이 겪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한 사회계층에 뿌리를 박고 結晶할 겨를이 없는 현상이 있다. [중략] 자기의 사회적인 소속이 분명치 않고 공통의 관념적 광장을 찾지 못할 때 사회는

원자적인 상태로 빠져 버리며 통일적인 공동행동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구조는 혼란에 빠지고 이른바 ‘아노미’의 상태가 나타난다.<sup>3)</sup>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사상계>는 지식인의 계몽주의적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근대화와 “民主主義體制의 具體的 추진자”는 “정치적 엘리트”라고 보았다.<sup>4)</sup> “적극적인 생활태도,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아가는 합리주의 정신, 자타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護憲遵法하는 정신,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참여의식, 자기판단과 자기 책임하에 계획하고 실천하고 생산하는 자주적 자치적 정신, 정의에 입각한 페어플레이의 태도, 권력악, 사회악과 용감하게 대결하는 민주적 시민정신, 이러한 정신자세야말로 근대적인 의식구조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데,<sup>5)</sup> 지식인들이 이러한 자세의 구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보았다. 전통적 인습에서 벗어나 근대적 가치와 관습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3. 4·19에서 5·16으로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학생시위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하자 <사상계> 지식인들은 감격해했다. 이는 곧 민주혁명으로 인식되었다.<sup>6)</sup> 흥미로운 것은 4월 혁명으로써 비로소 한국인 민주국가로서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대목이다. 민주주의라는 꽃이 한국에서 개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외국 언론의 조롱에 크게 자존심이 상했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4월 혁명은 희망을 넘어 치유가 되었다.

나는 이 정변을 우리 민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룩한 민주혁명이라 본다. [중략] 20년전에 우리는 이미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헌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를 조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민주헌법을 채택한 것은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때의 국제정세의 영향밑에, 말하자면 「밖으로부터의 혁명」(Revolution von Aussen)을 우리는 피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중략] 「밖으로부터의 혁명」에 의하여 민주헌법을 채택한 대한민국은 일확천금으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된 졸부의 처지에 비하여 마땅하다. 그렇게 때문에 민주한국의 출발에는 처음부터 검은 그림자가 따랐던 것이다. [중략] 자유는 헌 신짜같이 유린되고 관권은 무능, 부패, 횡포로 차서 드디어는 3·15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의 박탈이라는 극악의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중략] 민주주의는 이번 혁명으로서 이 나라, 이 풍토에 비로소 굳센 뿌리를 박은 것이다.<sup>7)</sup>

자유니 민주주의니 시민사회니 시민적 인간이니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 서투른 수

3) 吳炳憲, 「現代 이데올로기의 性格: 理念과 非合理的인 要素가 混在하는 現代政治에서」, 『사상계』 제 107호 (1962년 5월), p.38.

4) 洪思重, 「自由와 暴力: 누가 民主主義를 葬送하려나」, 『사상계』 제152호 (1965년 10월), p.68.

5) 「券頭言: 教育의 改造」, 『사상계』 제156호(1966년 2월), pp.26-27.

6) 장준하, 「民權戰線의 勇士들이여 편히 쉬시라」, 『사상계』 제82호 (1960년 5월), p.18.

7) 兪鎮午, 「暴風을 뚫은 學生諸君에게」,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pp.58-60.

입개념이었다. 8·15의 해방으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단번에 배급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피의 투쟁의 산물도 아니요, 혁명으로 전취한 권리도 아니었다. 그러기에 자유니 민주주의니 시민사회니 시민적인간이니 하는 개념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었다. 우리속에서 올라온 진리가 아니고 우리 밖에서 주어진 관념이었다. 생생한 현실이 아니고 소원한 이념이었다. 근대서구사회가 봉건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깊이 자각한 근대적시민계급이 역사의 긴 세월을 두고 전제군주 및 봉건세력과 피의 치열한 혁명투쟁을 오랫동안 치르지 아니하면 안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는 무수한 근대적시민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전취한 권리의 체계요, 가치의 유산이다. 피로써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귀중하기 한량 없다. 어느 독재자나 국가권력이 이 권리의 체계를 깨뜨리거나 빼앗으려고 할 때 근대적시민은 피로써 이것을 지켰고 또 지킬 줄을 알았다. …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민적 인간의 주체적체험이 없었다.<sup>8)</sup> [중략]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4·19혁명에서 비로소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았고 시민사회와 시민적 인간을 몸소 체험했다. 4·19의 피의 혁명과 더불어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자유를 논할 자격이 생겼고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상계>의 여러 필자들이 4·19를 유럽사에서의 부르주아시민 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원하여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혁명을 애써 민중혁명과도 구별하려했다. 4·19 직후 발행된 『사상계』 제83호는 4월혁명을 “민중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sup>10)</sup> 그러나 『사상계』 지식인들은 4월혁명이 결코 민중혁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집권자는 언제나 피치자와의 「동일화의 신화」 속에 그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두어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지속할 수가 있다”는 지적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구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신화라고 적시함으로써 동의를 반드시 사실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성될 수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상계』가 사회의 지도층과 피지도층 또는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간극을 매우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상계』 83호의 권두언에서 장준하는 이렇게 지적한다.

사월혁명은 자유와 민권의 선각자인 이 땅의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다. 그 기반을 닦아온 것은 정객들 보다는 양심있는 이 나라의 교수들과 교사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요 이에 박차를 가해준 것은 신문이나 잡지들을 포함한 매스컴의 힘이고, 그 불길이 되어 탄 것은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정의감이 가장 두터운 학도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장준하는 “또다시 민중의 편에 서노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민중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주체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지식인들이 이들을 이끄는

8) 安秉煜, 「리의 世代와 義의 世代」,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p.100.

9) 安秉煜, 「리의 世代와 義의 世代」,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p.101.

10) 「民衆의 勝利」,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p.56.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장준하와 여러 『사상계』 지식인들은 3·15 부정선거를 목도하며 자유당 독재에 절망하던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정기를 일으킴에 동지를 규합하고 민주생활의 터전을 굳건히 하여 국토통일의 기틀을 이룩함에 그 방안을 찾고 萬民均霑의 복지건설을 위한 계책을 수립함에 전국의 지성을 모아야 한다는 뚜렷한 사실 앞에 우리는 엄연히 서서 오직 민도 향상에만 그 기대를 걸고 묵묵히 달마다 한권씩의 잡지나마 이 사회에 내어 놓았던 것이다”라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民度 向上”에서 찾고 있었다.<sup>11)</sup> 그러다가 기대치 않았던 4·19가 터지며 자유당 정권의 붕괴가 일어나자 사상계 지식인들은 4월 혁명을 일종의 지식인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민도향상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민생의 향상없이 민도의 향상을 바랄 수없고, 민도의 향상이 없이 민주국가의 실을 거둘 수 없는 까닭이다.”<sup>12)</sup> 『사상계』를 통해 활발히 정치논평활동을 해오던 신상초는 심지어 “악인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의감이 민중에게 강하지 않다”고까지 언급하며 “의식수준이 낮은 일부 서민층”이 이승만과 그의 추종세력에 대해 오히려 “동정을 느끼고” 이로써 “이승만 폭정이 20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사회심리적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sup>13)</sup>

그러나 4월 혁명에 대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감격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특히 “데모만능주의”와 자유의 확대에 따른 책임의식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저변의 이유로는 아직 국민들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지목되었다. 따라서 민도의 향상과 성숙을 위한 <사상계>의 계몽 역할은 여전히 시급한 필요였다.

사월혁명은 단순히 여야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을 따름 [중략] 혁명이란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불철저한 것이었다. [중략] 우리 국민 가운데는 배반당했다는 생각을 가진 이 적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월혁명이 배반당한 소이는 사월혁명이 무계획적인 것이어서 혁명의 논리를 관철하기 어려웠다는 객관적 사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려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대중의 지성수준이 낮은 탓이기도 하다.

학원마다 분규요, 또 거기에는 폭력사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우리의 교사와 학생은 모두 지성을 잃었던 말인가? [중략]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데 반드시 폭력적 불법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기업체마다 소동이요 노조가 자본가나 경영자를 쫓고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수이니 우리의 생산활동은 모두 마비되고 중단돼도 좋다는 뜻인가? 외곡됐던 노·자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일이지만, 거기에도 서루들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할 줄 아는 루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월혁명후 데모의 과잉, 남발은 우리 사회의 일종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중략] 자기만은 절대 옳다는 유아독존의 사상과 개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할 줄 모르는 반민주주의적 사상이 하극상과 모략중상의 귀태를 빚어낸 것 [중략] 대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자유의 폭이 넓어지면 책임의 폭도 그만

11) 張俊河, 「卷頭言 - 創刊 七周年 記念號를 내면서」, 『사상계』 제81호 (1960년 4월), p.16.

12) 張俊河, 「또 다시 우리의 向方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p.36.

13) 申相楚, 「李承晚暴政의 終焉 - 4·26은 革命의 終末이 아니라 始發點이다」,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p.86.

치 넓어져야만 우리는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원래 그 주도역을 담당할만한 모체를 가지지 못한채 지나친 악정과 상상을 절한 폭압에 폭발된 거족적 분노만으로 이룩한 혁명인지라 혁명후에 나타난 그 수많은 자칭혁명의 주인공들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계속하여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고귀하게 뿌려진 피의 훈향을 맡으며 자라리라고 믿었던 자유는 이제 방종으로 전락하고 폭력을 제거하고 사회의 안녕질서와 그 복지를 찾자 행사되었던 민권은 자신을 또한 폭력으로 타락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이 같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하나의 독재를 유치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민족사상 최대의 영예로 만방에 자랑한 자유와 민권을 위한 사월의 투쟁은 그 빛을 잃게 될 것이요, 또다시 만방의 조소거리가 될 것이다.<sup>15)</sup>

이러한 인식 하에 사상계 지식인들은 4.19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과거의 구악을 청산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경제부흥에 진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경제적 부흥만이 정치적 자립을 꾀할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생명같은 「자유」를 수호함도 이에 따른다.”<sup>16)</sup> “자유는 정치적 면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물질적 기반으로서 힘찬 경제적 건설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정신적 토대로서 국민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sup>17)</sup> 4.19 혁명으로 정치적 자유를 되찾았지만 정치적 자유를 보다 굳건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자유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친구파의 대립양상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혼란, 계속되는 학생데모,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혼란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선전전도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월혁명 이후 과도기에 처한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대내외적인 도전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장준하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현국회와 정부가 이 이상 더 우유부단과 무능, 무계획을 일삼으면서 그 정치적 책임의 수행을 망각한다면, 본지는 새롭고도 힘찬 민족적 자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가차없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첨부해두는 바이다.”<sup>18)</sup> 또 다른 필자는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시민의 자기 훈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기도 했다.

링컨이 “of the people”이라고 말한 의도를 간단히 부연한다면 민주정치란 끊임없는 자율과 자치의 실험이라 하겠다. 실험은 ‘테스트 케이스’란 정도의 뜻과는 다르다. 한 국민에게 민주정치의 적합여부를 시험 삼아 훈련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제도가 부단한 시민적, 공민적 훈련, 국민 각자의 자기훈련의 과제와 병행해서만 유지됨을 의미한다.<sup>19)</sup>

14) 「卷頭言: 四·二六 以後의 社會相을 보고」, 『사상계』 제84호 (1960년 7월).

15) 장준하, 「卷頭言: 一九六十年을 보내면서」, 『사상계』 제89호 (1960년 12월) pp.34-35.

16) 「卷頭言: 一九六一年을 맞으면서」, 『사상계』 제90호 (1961년 1월), p.29.

17) 「卷頭言: 三·一情神은 어떻게 繼承되어야 할 것인가?」, 『사상계』 제92호 (1961년 3월), p.35.

18) 張俊河, 「卷頭言 - 創刊 八周年 記念號를 내면서」, 『사상계』 제93호 (1961년 4월), pp.34-35.

19) 曹街京, 「情勢와 自由: 오늘의 課題管見」, 『사상계』 제97호 (1961년 8월), p.21.

<사상계> 지식인들이 제2공화국기의 혼란상에 실망하던 가운데 5·16이 발생했다. 5.16 직후 출간된 사상계 제95호의 권두언은 「五·一六 軍事革命과 民族의 進路」라는 제목 아래 작성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5.16은 ‘혁명’으로 인식되었다. “부패와 무능과 無秩序와 共產主義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民族主義的 軍事革命”이라는 것이다. “五·一六 革命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開花시켜야 할 民主主義의 理念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으나 위급한 民族的 現實에서 볼 때는 不可避한 일이다. [중략] 無能하고 姑息的인 執權黨과 政府가 수행하지 못한 四·一九革命의 과업을 새로운 革命勢力이 수행한다는 點에서 우리는 五·一六 軍事革命의 積極적 意味를 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사상계>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民主政府로의 復歸의 준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차후의 민족적 지도세력의 육성이요, 공명정대한 절차를 통하여 政權을 이양함으로써 民主政治의 확고부동한 전통을 수립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도 했다. <사상계>는 5·16을 근대화와 민주화의 과업에 대한 방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과업 완수를 위해 불행하지만 필요한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5.16 군사]혁명은 사실 4.19의 연장이었다. 5.16도 일종의 신세대의 구세대 불신임이란 새 의식에서 일어난 것이며 이 역시 과거의 상전-노복의 낡은 사상 자세에 반항하여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는 행동에 불과하였으니 그 혁명의식에 있어서는 4.19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중략] 이자가 다 민족적 양심과 정기의 표현이었음은 일반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4.19에 동정하던 우리의 정신이 5.16에도 같은 동정을 표시했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사람들은 5.16의 이러한 우리나라 역사적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서양식 쿠데타로만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군인독재가 아닌가 하여 의아하는 심정을 풀지 못하는 모양이다. 외국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가운데서도 인습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군의 혁명공약을 그대로 신임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중략] 구태의 사상자세는 그 성격이 개인본위, 정당본위, 또는 어떤 세력본위의 사리추구가 제일위의 목표요 국리민복이나 공리공익은 항상 하나의 간판, 명분, 수단으로 내세우는 소위 「후의이선리(後義而先利)」하는 자세이므로 이러한 자세 하에서는 집권하는 자는 여하한 혁신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앞뒤를 맞춰놓고 보면 드 일들이 결국은 사리추구를 위한 것이란 것이 알려지게 되어 국민은 그것을 신용하지 않게 되며 국민에 있어서 그러한 구태를 버리지 못하면 설령 정부가 성심성의로 공리공익을 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자발적 협동적정신으로 순종함이 없이 강제와 압력과 감시만으로서만 따르게 되어 결국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상극과 분열과 불안이 생기어 모든 병폐가 거기로부터 발생한다. [중략] 민주국가의 면목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군정을 하루 빨리 물러나게 하려면 그길은 우리가 하루 바빠 우리 자신을 주인구실할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들어 놓는 길 밖에 없다. 지금 군정부는 2년간에 정권을 국민에게 돌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군정부가 지켜 줄 것을 믿으며 또 그렇기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에 가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민주주의 주인자격을 갖추느냐에 있다. [중략]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군주전제하에서는 우리가 노복의 자세로 살아왔지만 이제 민주정치 하에서는 우리는 주인의 자세로 살아야 하겠다.<sup>20)</sup>



#### 4. 기대에서 실망으로, 다시 반대로

##### 군사정권에 대한 점증하는 실망과 배신감

점차 군사정권에 대한 실망이 커가면서도 1963년 2월 박정희 의장의 정치은퇴, 불출마선언과 함께 잠시나마 ‘혁명군인들’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3월 15일 박정희 의장이 다시 마음을 바꿔 계엄연장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혁명정부에 대한 불신 가중됨. 이 즈음 신상초의 글에서는 군복을 벗고 출마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으나 군사정권에 대한 신뢰 상실의 후유증은 컸다. 그리고 사상계 민주주의자들의 관심은 눈앞에 다시 나타난 독재정치에 대한 대응에 일차적으로 맞추어졌다. 그러면서 국민 대중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들에 대한 계몽의 사명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즉 제2공화국 시기 자주 나타나던 민중에 대한 그리고 민도의 낮음에 대한 실망은 더 이상 사상계에 등장하지 않고 대신 백성이 ‘깨어나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 ‘민족적 민주주의’ 비판

박정희는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1963년 9월 23일 정견발표를 통하여 “이번 선거는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의 대결이다”라고 하였다.<sup>21)</sup> 김종필도 1963년 11월 4일 고려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 민족주의의 주장이 “독재주의를 배척하며 자유민주주의적 소지 위에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대차가 없습니다”라고 언급.<sup>22)</sup>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상계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이나 파키스탄 아유브칸의 ‘기본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며, 독재자들이 무슨 민주주의라고해서 수식어를 붙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는 보편적 사조라고 지적했다.<sup>23)</sup> “民主主義를 기피하는 民族至上主義야말로 시대착오적인 幻想이요 氣分的孤立主義에 떨어져 共產主義者들의 手法에 농락되기 쉬움을 깨우쳐주고 싶다”는 것이다.<sup>24)</sup>

#####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

20) 李相殷, 「民主再建을 爲한 思想的 姿勢 - 徹底한 自己批判으로」, 『사상계』 제102호 (1961년 12월), pp.38-43.

21)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민족주의 토대로,” 『경향신문』 1963년 9월 23일, 권희영,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의 성장: 두 개의 정체와 세 갈래 노선」, 『한국현대사연구』 제1권 제1호 (2013), p.122에서 재인용.

22) “자유민주주의가 바탕,” 『경향신문』 1963년 11월 5일, 권희영(2013, 122)에서 재인용.

23) 申相楚, 「民主主義는 神話가 아니다 - 데모크라시의 올바른 意味」, 『사상계』 제150호 (1965년 8월), p.113.

24) 「卷頭言: 議會民主主義를 謀略하지 말라: 對日依存傾向을 警戒한다」, 『사상계』 제121호 (1963년 5월), p.27.

한일협정반대는 군사정부의 연장으로서의 제3공화국 정부에 대한 신뢰붕괴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一九六五年의 모든 국내정치는 韓·日會談問題로 직결”되어 있었다.<sup>25)</sup> 한일관계의 정상화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도 보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지배가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컸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일본의 귀환을 제3공화국 정부가 괴뢰정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하였던 것이다. 이는 (일본에 대한) 저항민족주의와 반독재 민주주의 정신의 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회담/한일협정에 대한 민족주의적 비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합법화해 보려는 무서운 책략이 숨어있는 것이다.”<sup>26)</sup>

“만일 한·일관계가 현재대로 타결되는 날에는 멀지 않아 이 나라는 일본매판자본의 종복으로 전락할 것이요, 따라서 구만주국을 방불케하는 일본의 괴뢰정부가 이 민족에 군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sup>27)</sup>

“본질적으로 상전과 하인간의 협약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과 위신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킨 극단적인 불평등협정이다.” “결국 한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일협정을 막후에서 추진한 **미국에 대한 불만**: “미국 정부는 도리어 한국국민의 극도로 편협한 대일감정의 결과로 해석하고 많은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비정상적 정상화에 대한 무수한 비판과, 국민들의 물끓는듯한 국론을, 소란을 취미로 하는 한국인의 습성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무시해왔다.”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은 ... 그저 ‘한정’만 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근자에 이르러 미국의 정책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sup>28)</sup>

“근자 五, 六年間에 거의 절대적인 美國에 대한 신뢰와 友好關係에 금이 가기 始作하고 동요의 빛이 보이기 시작” “미국이 과연 얼마만큼 서구식 民主主義가 韓國에 土着化하여 개화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게 하는 현상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美國은 왜 무비판적으로 이를[한일협정]을 지지하고 있는가 라는데 대한 씻을 수 없는 의구”<sup>29)</sup>

자유주의적 비판:

민주주의에 대한 신상초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이다. 그러나 현대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동의에 의한 지배이다. 소수의 치자 즉 지배자가 피치자 즉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의는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와 의견을 지닌 집단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얻어진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언론과 의사표시가 보장되어야 하는

25) 李邦錫, 「褪色한 民主主義와 民族主義: 迂餘曲折과 波瀾重疊의 정치사」, 『사상계』 제154호 (1965년 12월), p.36.

26) 張俊河, 「卷頭言: 現行 韓·日會談을 粉碎하자」, 『사상계』 제147호 (1965년 5월), pp.26-27.

27) 張俊河, 「卷頭言: 이 나라와 이 社會는 어디로?」, 『사상계』 제147호 (1965년 6월), p.27.

28) 編輯同人一同, 「卷頭言: 韓·日協定調印을 廢棄하라」, 『사상계』 제149호 (1965년 7월), pp.8-9.

29) 「卷頭言: 美國政府의 對韓政策은 무엇인가」, 제152호 (1965년 10월), p.27.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sup>30)</sup>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히 표준적인 이해이자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계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인식에 근거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 언론자유 및 평화적시위의 권리에 대한 강조

한일회담 및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박정희 정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진압·해산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는 언론과 학원에 대한 사찰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언론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등 자유주의적 권리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에 대해 『사상계』는 날카롭게 반응하였다.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정부가 강제 진압한 “세칭 4·17사태”에 대해 장준하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평화적 시위는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불법집회’니 ‘불법데모’니 하고 있지만 문노니 누가 그러한 집회와 데모를 불법으로 만들었는가? … 폭동도 아니요 난동도 아닌 군중의 행진을 이러한 야만적 수법으로 탄압하는 사례를 우리는 적어도 민주주의의 간판을 걸어놓고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일찍이 본 일이 없다.”<sup>31)</sup>

“「軍國」의 「民國」으로의 환원은 주로 形式的인 것이요 아직도 議會나 행정부 그리고 정부산하 각종 기업체나 각종 단체에 있어서 ○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五·一六쿠데타를 주도했거나 혹은 후에 적극 동조했던 軍出身의 예비역장성·장교들이라는 것, 그리고 軍이 우리 나라 최대·최강의 정치적 압력단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예누리 없이 직시 평가한다면, 朴정권은 군사정권의 실질적 연장이요 한국은 실질적으로 軍國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sup>32)</sup>

그러나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도덕적인 성격도 지녔다.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권층을 사회의 기운을 쇠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일삼음으로써 오히려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지도층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집단이어서 사실상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다.

“집권한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국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집권하는 소수자는 창조적인 세력으로 대중이 모방하고 추종하는 존재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져다 우리는 국민 사이에 사회발전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든가 비전을 던져준다든가 하는 말로 표현하여 왔다.

치자가 이러한 창조성을 상실한 채 집권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국가의 위기가 조성되기에 이

30) 申相楚, 「民主主義는 神話가 아니다 - 데모크라시의 올바른 意味」, 『사상계』 제150호 (1965년 8월), p..

31) 張俊河, 「卷頭言: 이 나라와 이 社會는 어디로?」, 『사상계』 제147호 (1965년 6월), p.26.

32) 申相楚, 「善良한 管理者: ‘民主的大統領’은 어떻게 行動해야 하는 것인가」, 『사상계』 제153호 (1965년 11월), p.93.

른다. 다스리는 소수가 다수의 이익을 찬탈하는 존재로 눈에 비치게 된다면 국민은 먼저 그러한 치자에 대한 항거의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민항거의 소리한 이같은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병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신음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기혁신의 길을 가거나 새로운 대체세력에 기회를 양도할 수 있는 현명을 지닌 집권자라면 나라의 불행은 결코 심각한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진정한 집권 세력이란 국민의 반발에서 잃어버린 창조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한다. 이같은 정부를 가리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집권세력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국민은 지금의 치자를 추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국민항거의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들은 한 오라기 양식도 없이 역사상 최대의 부패와 부정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국민의 소리를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역사상 가장 무력한 국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인상만 짙어진다.”<sup>33)</sup>

군사정권이 조성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자유가 억압되는 데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경찰과 군대의 그들이 釀成하고 있는 공포의 분위기”

“韓·日條約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오직 歷史만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대한 비판을 곧 선동이라고 속단하여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愛國이라는 이름아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고의 생략이 강제되어 왔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할 것이 아닐까.”<sup>34)</sup>

“작년 六·三사태나 금년 八·二五사태 등 위기상황이 벌어지면 정당이나 국회 등 政治集團은 정치권외로 밀려나가고 朴正권은 빨가숭이의 군사력을 발동하여 소란스러운 사태를 진압하고 그 정치적 의도를 실현해왔다. 이것은 朴정권의 궁극에 있어서의 실력적 기초가 바로 군사력에 있음을 아낌없이 폭로하는 것”

“軍의 정치적 압력 작용을 원활하게 그러나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정치를 본래도에 올려놓기 위한 최대의 과업”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표리부동한 言行을 하게 되는 事會에서는 민주적인 토론과정도 決濟과정도 성립되기 어렵다. 대체 민주주의란 共同體의 성원이 아무런 위협도 공포도 느끼지 아니하고 토론과 설득을 할 수 있는 환경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한쪽이 무기를 잡고 위협을 하는데 반대쪽이 무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운위한다는 것부터가 어리석다.”<sup>35)</sup>

“정치권력과 國民의 自由 및 권리가 상호배척하는 배리관계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 정권은 물위에 뜬 기름처럼 대중과 유리한 存在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런 背離關係의 극한화는 暴力革命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나는 우리 국가가 이미 그런 배리관계를 내포하게 되었다고 판단” (96-97)

33) 「卷頭言: 國難에 부딪혀서」, 『사상계』 제151호 (1965년 9월), p.26.

34) 洪思重, 「自由와 暴力: 누가 民主主義를 葬送하려나」, 『사상계』 제152호 (1965년 10월), p.71.

35) 申相楚, 「善良한 管理者: ‘民主的大統領’은 어떻게 行動해야 하는 것인가」, 『사상계』 제153호 (1965년 11월), p.94.

“최근 대통령은 韓·日협정 반대운동을 가리켜 학생의 일부, 교수의 일부, 야당의 일부, 국민의 일부가 반대하고 대중을 선동하였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조인반대파동, 비준반대파동이 벌어진 것이라 하고 시국 악화의 책임을 모두 그들에게만 돌리는 담화를 몇 번 발표하였지만, 이는 적어도 현명한 政治人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중략] 한·일협정 반대가 국민 중 소수의 의사인가 혹은 다수의 의사인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지배적인 세론을 불평분자의 선동에 의한 조작으로 간주하고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갖고서 이를 억압하는 데만 급급하여왔으므로 정국은 불안해지고 민심은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거칠게 흩어지기만 하는 것이다. [중략] 국제정치적 절대적인 압력을 받아 대외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번 韓·日協定の 조인과 비준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상 압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약을 맺게 되었다고 하면, 저간의 경위를 국민 앞에 납득시키기 위해 인내 깊은 설득을 벌여야 하는데 정부는 그것마저 게을리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별의 별 의혹을 사게 되는 것이다.”(98-99)

자유민주주의의 추상적 기준을 이상화 내지 절대화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정치를 부정하는 입장, 정치적 반대의 고정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主權을 찾아세우기 위하여 좀더 근본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sup>36)</sup>

“국가 발전을 책임진 것은 執權勢力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건설적인 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한 나머지 그들의 惡을 소극적으로나마 감소시킬 수 없을까 하는 소원에서 항거하는 在野의 세력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다.”<sup>37)</sup>

“우리가 그들과 마음에 있어선 訣別한지 이미 오래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심한 分裂工作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새로운 세력을 키워 國政을 담당시킨다는 과제에 국민은 단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도사리고 있지만, 비판의 눈 이상으로 이에 대하여 聲援을 보내려는 마음을 우리는 지녀야 할 것이다.”<sup>38)</sup>

“법이 정의를 떠나서 질서만을 내세우고 그것을 強制力으로 밀고 나가려고만 할 때는, 法の 파괴를 정의로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의 秩序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혁명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혁명은 實로 국민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정의라고 인식되지 않는 秩序를 강요 당할 때 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의라고 믿는 바 가치를 實現시킬 수 있는 秩序를 法秩序로 昇華시키려는 극렬한 행위인 것이다.”<sup>39)</sup>

36) 「권두언: 오늘의 極限狀況은 누구의 責任인가」, 『사상계』 제153호 (1965년 11월), p.27.

37) 「卷頭言: 一九六五年을 보내면서」, 『사상계』 제154호 (1965년 12월), p.27.

38) 「卷頭言: 새 해를 맞이하면서」, 『사상계』 제155호 (1966년 1월)

39) 張俊河, 「法の 精神과 秩序: 恣意的인 法制定과 法運營의 現實」, 제153호 (1965년 11월), p.89.

## 5. 결론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었던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나?  
사상계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는 어떤 것이었나?

### (1) 냉전이 부과하는 제약

- 반공민주주의와 안보국가로서의 성격
-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있는 환경 아래에서 이미 민주주의의 범위는 협소화

### (2) 근대화의 압력

- 빠른 발전을 통해 후진성을 탈피해야한다는 강박관념
- 자유민주주의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자 가치였기 보다는 근대화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지님.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한국지식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사례에도 비슷하게 드러남).
-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근대화를 모토로 내걸고 추진한 박정희 권위주의와도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서 권위주의적 근대화에 포섭될 위험을 내포한 것이기도 함.
- 서구사회에 대한 강한 동경: 오리엔탈리즘적 자기인식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자유니 민주주의니 시민사회니 시민적 인간이니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 서투른 수입개념이었다. 8·15의 해방으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단번에 배급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피의 투쟁의 산물도 아니요, 혁명으로 전취한 권리도 아니었다. 그러기에 자유니 민주주의니 시민사회니 시민적 인간이니 하는 개념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었다. (...)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4·19혁명에서 비로소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았고 시민사회와 시민적 인간을 몸소 체험했다. 4·19의 피의 혁명과 더불어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자유를 논할 자격이 생겼고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후세의 우리 사가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할 때, 4·19를 빛나는 역사적 시민혁명의 날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근대 서구사회가 200년 전에 치른 혁명을 이제 치른 것이다. (안병욱, “리의 세대와 義의 세대,” 『사상계』 83호, 1960년 6월, pp.100-101.)

### (3) 지식인 주도성

- 대중권력(popular power)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
- 대중에 대한 계몽주의적 태도

학원마다 분규요, 또 거기에는 폭력사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우리의 교사와 학생은 모두 지성을 잃었던 말인가? 물론 학원분규의 원인을 이루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는 정당한 것도 있고 정당치 아니한 것도 있음을 부인치 못하지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데 반드시 폭력적 불법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기업체마다 소동이요 노조가 자본가나 경영자를 쫓고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수이니 우리의 생산활동은 모두 마비되고 중단돼도 좋다는 뜻인가? (...) 자유의 확장이 곧 방종과 무질서와 혼란을 자나내고 있는 것이니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기실 자유를 누릴만한 자격이 없는 국민인 것이요, 무질서와 혼란을 이유로 또 다시 독재자가 등장해도 그 앞에 굴복할 가능성이 큰 국민인 것이다. (‘권두언: 4·26 이후의 사회상을 보고,’ 『사상계』 84호, 1960년 7월, p.29.)

-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동의에 의한 지배로 이해
-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박정희가 대중에 대해 취한 자세와도 일맥상통함. 더욱이 박정희의 대중정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동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음. 이로써 박정희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당 정도 무력화.